	<div>2013년 국정감사</div> <div><b>조 달 청 - 통 계 청    보도자료</b></div> <div>  <b>국회의원 류성길 (대구 동구갑)</b> </div>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b>보도일시</b>	<b>2013. 10. 29.(화)~</b>	<b>담당자</b>	<b>이 영 일    비    서</b>

## [조 달 청]

### ▶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안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

- ☞ 도급순위 1~20위의 16개 업체에 대한 제재로 인한 SOC사업 차질 사전 방지책 마련
- ☞ 실리콘 비축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여 업체, 국세·사회보험 체납문제 심각

#### - 작년 한 해, 정부조달사업 참여업체 중 22.6%가 체납업체

- ☞ 정부조달사업 참여업체의 22.6%에 달하는 16,432개 업체가 3,350억 원의 사회보험 체납
- ☞ 국세 체납업체는 5,622개로 체납액은 4,342억 원에 달해

#### - 조달청과 국세청 건강보험 등 유관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보를 공유할 필요

### ▶ 공사비 증가의 주범! 시설공사설계변경, 예산 누수 막아야

#### - 지난 10여년 간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액 무려 14조원

- ☞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실적 최근 3년간 17건에 불과
- 잦은 설계변경에 대해 조달청이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

## [통 계 청]

### ▶ 지방조직 개편안! 장기비전 제시가 우선이다.

- ☞ '08년 조직 개편 후 5년 만에 나온 조직 개편(안), 당초 개편 목표 달성 여부부터 살펴봐야...

### ▶ 나라통계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자료의 내실화와 공유도 중요해

- ☞ 개별 통계작성기관들이 관리하는 다양한 통계자료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각 기관별 통계자료의 공유를 통해 정부 3.0 구현에 앞장서야...

##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 (조달청)

-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 지난 2012년도 조달청 국정감사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질의 1) 먼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담합행위로 적발된 19개 부정당업자에 관한 부분임.  
당시 19개 적발업자 중 16개 업자가 국내 도급순위 1~20위에 포진되어 있어 6개월~2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정부의 SOC사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을 당부 드렸음

이 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관련한 현황은 어떠한지?

질의 2) 두 번째, 원자재 비축과 관련한 부분임.

'08년 당시 세계경제 회복시 수요증가에 따른 가격상승 등을 사유로 원자재를 대량구매/비축을 결정했으나 한 차례도 방출하지 않은 비축창고가 4곳이나 되었음. 또, 경기도 소재의 중소기업이 경남비축창고에서 실리콘을 구입해 간예를 지적하며 비축과 방출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을 당부드렸음.

실리콘 비축창고 현황은 어떠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있었는지?

**정부조달사업 입찰 참여업체, 국세/사회보험 체납 심각**  
 -정부조달참여업체의 22.6%가 사회보험 체납업체, 체납규모는 3,350억원-

□ 현황과 문제점

- (부정당 업체의 체납현황) '12년 조달청이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2,672개 업체임. 이중 국세 체납업체는 5,622개 업체로 체납규모는 4,342억 원이며 사회보험 체납업체는 16,432개 업체로 체납규모는 3,350억 원에 달함. 조세 및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정부조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 (국세 체납현황) 국세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개별 업체별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12년도 한해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 국세체납 업체는 5,622개로 체납액은 4,342억 원임
- (사회보험별 체납현황) 산재보험 체납업체 11,072개(1,169억원), 국민연금 체납업체 12,380개(925억 원), 건강보험 체납업체 11,982개(688억원), 고용보험 체납업체 11,003개(566억원) 4대보험 모두 체납한 업체는 7,338개에 달함

〈정부조달 참여 업체의 사회보험 체납현황〉

(단위: 백만원/개)

구분	총 체납액수	총 업체개수
고용보험	56,664	11,003
산재보험	116,902	11,072
국민연금	92,539	12,380
건강보험	68,868	11,982
합계	334,975	

〈1억 원 이상 체납현황〉

(단위: 개)

	1억 이상~5억 미만	5억 이상~10억 미만	10억 이상	합계
고용보험	44	5	3	52
산재보험	168	14	5	187
국민연금	41	5	0	46
건강보험	47	3	0	50

- (조달청과 유관 기관의 양방향 정보공유 필요) 현재 조세 및 사회보험 체납업체에 대한 정부조달사업 입찰제한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조세체납 및 사회보험체납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조달청은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 또는 선금지급 시 국세징수법령, 지방세 기본법령에 따라 국세, 지방세 완납여부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 대금지급 전 해당업체의 조세체납 현황을 조회하여 체납기록 확인 시 완납 영수증을 첨부해야 대금지급을 하고 있음. 또한 국세청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 사전에 압류조치를 했을 경우 대금에서 체납액을 제외하고 지급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 2013.3.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국세청의 압류조치에 따른 대금지급 유보) 국세청이 업체에 대한 압류조치 등 법적 조치를 할 경우 대금에서 체납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업체에 지급하는데 지난 '12년 한해 동안 369건에 걸쳐 43억원의 체납 국세를 징수함

- (조달청은 알고 국세청은 모르는 업체관련 정보) 조달청이 계약업체에 대한 대금을 지급 할 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체납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반대로 국세청은 체납업체의 수익발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보험 체납에 대한 정보공유는 전무) 조세체납과는 달리 사회보험체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상호 정보교류가 전무한 실정임.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4대 보험을 체납하여 관련기관이 채권압류통지를 해올 경우 대금지급 시 압류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체납 통보된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양 기관간의 교류는 전무한 실정임

○ (10조월에 달하는 조세채납 및 사회보험 채납) '10년 기준 국세와 지방세의 미정리 채납액이 8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사회보험료 채납액이 2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있어 국가재정과 사회보험료의 재정운용에 지장이 초래됨

- 미정리 채납액(8조3천억 원): 국세 4.9조원, 채납률 2.7%/ 지방세 3.4조원, 채납률 6.3%
- 사회보험료 채납액(2조3천억 원): 건강보험 909억원, 채납률 0.4%/ 국민연금 1조 8,878억원, 채납률 7.1%/ 고용보험 1,220억원, 채납률 2.8%/ 산재보험 2,254억원, 채납률 4.7%

〈국세·지방세 미정리 채납현황〉

(건수: 만건, 금액: 조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미정리 채납건수	120 (4,437)	141 (5,048)	140 (4,359)	138 (4,278)
미정리 채납금액*	3.5 (3.2)	3.9 (3.4)	4.1 (3.3)	4.9 (3.4)
미정리 채납률(%)**	2.1 (6.7)	2.2 (6.8)	2.4 (6.8)	2.7 (6.3)

※ ( ) 지방세 부분임

\* 미정리 채납금액 : 채납발생액 중 회수하지 못해 익년에 수납할 채납액

\*\* 미정리 채납률 : (미정리 채납액 ÷ 징수 부과액) × 100(%)

자료: 국세청, 안전행정부

○ (입찰참가 제한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연방구매규정(FAR)에 따라 연방세 채납액 3,000달러 초과 채납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있고, EU의 경우에도 EU조달지침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확정판결을 받거나 조세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계약 참가에서 배제시키고 있음

〈EU 조달지침상 공공계약 참여 배제 사유〉

절대적 배제 사유(제45조 제1항)	배제 가능 사유(제45조 제2항)
범죄조직 참여, 부패, 사기, 돈세탁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률상 파산, 폐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li> <li>•영업상 유죄 행위 또는 중대한 영업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li> <li>•<u>사회보장제 지불 의무 또는 조세납부 의무 불이행</u></li> <li>•허위의 진술 또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li> </ul>

※ 영국의 경우, EU 조달지침에 따라 '공공계약규정 2006(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제23조에 제한사유를 규정

## □ 질의 및 정책제언

○ (국세/사회보험 채납자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지난 '12년 한 해 조달청이 실시한 정부 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72,672개의 22.6%에 달하는 16,432개 업체가 약 3,350억 원의 사회보험료를 채납하고 있고 5,622개 업체가 4,342억 원의 국세를 채납하고 있음.

질의1) 작년 한해 조달청이 실시하는 정부조달 사업 입찰과정에 참여한 업체는 총 72,672개 업체로 이중 22.6%에 달하는 16,432개 업체가 약 3,350억 원의 사회보험료를 채납하고 있고 5,622개 업체가 약 4,342억 원의 국세를 채납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2) 현행법상 정부조달 사업관련 입찰에 대한 채납업체 자격제한 등의 규정은 없으나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해 채납 국세에 대한 징수가 가능 할 것임. 지난 한해 조달청이 계약업체에 지급할 대금에서 국세청의 압류조치를 통해 징수한 채납세금은 약 44억 원 수준이며 건수로는 369건에 달함. 조달청과 국세청의 업무협조는 어느 정도인지?

질의3) 조달청이 대금지급 전에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업체의 채납내역을 조사한 후 해당사항이 있으면 완납 영수증을 첨부해야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조달청 관계자에 따르면 채납에 대한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압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함. 조달청과 국세청 양기관의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4) 정부 3.0 차원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일환으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 정보를 공유한다면 보다 신속한 세금 징수가 가능 할 것임 청장님의 견해는?

질의5) 사회보험 채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조치로 인해 정부조달사업 대금에서 차감된 경우가 있었으나 13건(1억7천 만원)에 불과하고 사실상 정보공유로 인한 징수로도 보기 어려울 것임. '12년도 한 해 동안 정부조달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22.6%에 달하는 16,432개 업체가 약 3,350억 원의 사회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음.

- 현행법(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사회보험료 채납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압류의 대상이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공유 현황은?

(정책제언)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부조달사업 입찰에 체납업체 참여는 허용하되, 사업으로 발생된 수익에서 조세와 사회보험 체납액은 차감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은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업체에 대해 정부조달사업의 입찰 참여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체납에 대해 사전 예방과 함께 업체의 조세 및 사회보험 성실납부 문화를 안착 시킬 수 있을 것임.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구매규정(FAR)」에 따라 연방세 체납액 3,000달러 초과 체납자에 대해 원천적으로 입찰참가를 배제하고 있고, EU의 경우에도 「EU조달지침 제45조1항 및 2항」에 의거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확정판결을 받거나 조세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계약 참가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본 의원도 '12년 12월 조세 및 사회보험 체납 업체에 대한 정부조달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바 있음.

아무쪼록 해결책 마련에 좀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공사비 증가의 주범! 시설공사 설계변경, 예산누수 막아야!

- 공사비용 증가와 부실공사의 주범 막을 대책 마련해야-

### □ 현황과 문제점

○ '01년 이후 지난 12년간 정부가 발주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287건의 공사에서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총 14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당초 사업예산 대비 실적치 예산 간의 차이로 인해 국가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 '01년~'12년 까지 완료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287건의 사업은 당초 56조 2,300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의 완료 시점에서는 최종 사업비 71조 1,172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12년간 공사비 14조 8,872억원(당초 총사업비 대비 26.5%) 증액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05년에 완공한 '수원~천안 간 2단계 복선전철 사업'의 설계변경 횟수는 138회, '분당선~수서 간 복선전철 사업'의 설계변경 횟수는 108회임

-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08년 12월에 완공한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12년이나 지연되어 건설비용 7,500억원 ⇨ 1조 6,612억 원으로 대폭 증가

○ (꺾은 설계변경) 시설공사 계약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원가 증가가 일반적인 상황임. 이는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설계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함. 부실설계를 선별하고 설계품질을 관리하는 등의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총사업비 검토 대상공사 중, 최근 2년 간 조달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적정성 검토를 받은 토목공사건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유별 조정금액을 파악한 결과, 설계변경에 의한 조정금액은 최초 계약금액 대비 평균 5% 수준(공사규모별로 -0.2~15.3%)로 나타났다음

\* 공사규모 300~500억 원 수준의 공사는 설계변경을 통한 총사업비 증액을 선호하고,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물가변동 분 반영의 통한 총사업비 증액을 선호

〈총사업비검토 대상 토목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유 분석〉

(단위 : 억원, %)

공사규모	건수	계약금액		증액 (C=B-A)	증액사유		증액율(%)		
		최초(A)	최종(B)		설계변경 (C1)	물가변동 (C2)	전체 (C/A)	설계변경 (C1/A)	물가변동 (C2/A)
300~500	6	2,443	3,326	883	375	508	36.1	15.3	20.7
500~1,000	14	9,605	12,321	2,716	865	1,851	28.2	9.0	19.2
1,000이상	6	12,967	15,814	2,847	-29	2,876	21.9	-0.2	22.1
합계	26	25,015	31,461	6,446	1,211	5,235	25.7	4.8	20.9

\* 총사업비검토 대상공사 중, 2012~2013년 준공 또는 예정인 26건

자료:조달청

- (나라장터 계약의 한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계약금액 조정 시 변경금액만 입력하고 조정사유는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달청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 사유별 조정금액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통계조차 작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 조달청은 지난 '12년 기준 14조 3,346억 원의 시설계약 실적을 보였으나, 각 시설계약사업의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분을 반영한 후 실적(변경금액)과 준공치리를 통한 최종 사업금액에 대한 통계는 확보하지 못 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는 '13년에 준공된 사업의 건수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계약사업에 대한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수요기관별 시설계약사업 실적 연도별 추이

(단위 : 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전년대비 증가율)	136,360 (Δ5.3%)	238,994 (75.30%)	204,113 (Δ14.6%)	153,559 (Δ24.8%)	143,346 (Δ6.7%)
국가기관 (전년대비 증가율)	62,507 (Δ14.1%)	102,857 (64.60%)	85,317 (Δ17.1%)	65,969 (Δ22.7%)	60,260 (Δ9.1%)
자치단체 (전년대비 증가율)	53,031 (Δ7.2%)	105,051 (98.10%)	76,345 (Δ27.3%)	66,840 (Δ12.5%)	53,780 (Δ19.1%)
기타 기관 (전년대비 증가율)	20,822 (47.30%)	31,086 (49.30%)	42,451 (36.60%)	20,750 (Δ51.1%)	29,306 (41.20%)

자료: 조달연보

-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한계) 정부는 대형사업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은 제출한 설계 및 변경에 대해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인력 등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 없이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 차질이 발생됨

\* 총사업비 관리대상 : 사업기간 2년 이상 토목공사 500억원, 건축공사 200억 원 이상

- 실시설계완료 이전에는 설계에 대한 경제성 등을 검토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는 조달청의 설계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해야할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계초기 단계부터 타당성 조사와의 비교검토, 시설규모의 적정성, 과다·과소 설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획재정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요청에 의해 조달청이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건수는 '08~'10년 3년간에 걸쳐 17건에 불과하며 '11년 이후는 검토 실적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 □ 질의 및 정책제언

- (맞은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는 있으나, 맞은 변경을 통한 사업비 증액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발주처의 담합 등 부적절한 상황을 야기시킬 개연성이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의 1) 조달청은 시설계약의 맞은 설계변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2005년에 완공한 '수원~천안간 2단계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138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함

질의 2) 시설공사 후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 공사원가를 증가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 이것은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이 부족해 설계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발주기관에 대한 지원방안은 ?

질의 3) 조달청은 기획·설계단계, 공정률 50% 단계, 준공 2개월 전 예비준공검사 단계, 준공 이후 하자 점검 단계 등 공사단계별로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품질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사품질관리방안’ 추진 실적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총사업비 관리제도)

질의 4) 정부는 대형사업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총사업비 관리에 대해 조달청과 기획재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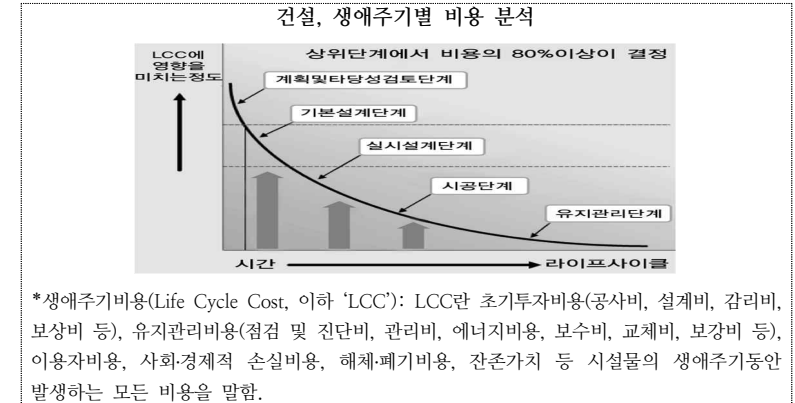
질의 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를 실적에 따르면, '08~'10년에 걸쳐 17건에 불과하며 '11년 이후는 검토 실적이 없음. 이처럼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 실적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한 기획재정부에 정책건의를 통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적정성 검토를 강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

질의 6)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합리적인 결정과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설계 및 그 변경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 7) 조달청이 설계검토 업무를 수행한다면, 검토가 시급한 분야와 대상, 적절한 시기와 검토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 8) 최근 3년간 나라장터를 통해 신규로 체결한 200억 원 이상의 건축공사는 연 평균 51건임. 만약 이 건수를 기준으로 조달청이 필요인력을 산정해 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시행할 경우 투자 비용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 답변바람.



○ (부정확한 시설계약 실적자료) 조달청은 조달제도의 개선, 조달과정의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조달연보를 발간해 오고 있음.

질의 9) 조달연보에는 시설계약사업의 실적 등을 연도별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으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 사업비 증가분 등을 포함한 자료는 기재하지 않고 일부 변동분에 대한 부정확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공사 준공처리에 대한 권한이 발주처에 있다는 이유로 낙찰단계 ⇨ 설계변경(물가변동분 반영)단계 ⇨ 최종 준공단계로 이어지는 사업비 변경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은 ?

질의 10) '12년 서면질의와 인터넷 질의를 포함하여 총 15,532건 중 83.1%인 12,907건이 시설공사와 관련된 질의였음. 그 만큼 시설공사의 경우 이해관계자들 간의 첨예한 쟁점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제언)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시설공사의 설계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조달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통계청) 지방조직 활성화 방안! 장기비전 제시해야...

- 하드웨어 개선보다는 소프트웨어 구축할 때 -

### □ 질의 및 정책제언

- (지방조직 개편이 최선의 개선책?) 통계청은 지난 '08년 대구지방통계청과 강원지방통계청을 '동북지방통계청'으로 통합하고 광주전남지방통계청에 전북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를 통합하여 호남지방통계청을 신설하는 등 기존 9청 3사무소를 통합하여 5청으로 개편했음. 당시 통계청은 기존 지방청장에 통계조사기능 위주에서 지역 통계분석 개발기능을 확대해 지역통계개발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개편을 단행함.

질의 1) 지난 '08년 지방통계청 개편 당시 전국 시도별로 분산(9청3사무소)되어 있던 지방 통계청 및 사무소를 통합하여 5개청으로 개편했음. 당시 통계청은 기존 지방청장에 통계조사기능 위주에서 지역 통계분석 개발기능을 확대해 지역통계개발 지원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그 실적은?

질의 2) 최근 통계청은 광범위한 관할구역으로 인한 효율적인 국가통계 생산에 한계 등을 문제로 제시하며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현재 지방통계청의 경우 직접 작성하는 통계는 없고 기초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 위주의 업무에 거치고 있는데, 지방통계청이 5+2로 개편되면 위 문제들은 개선되는 것인지?

질의 3) 통계청의 지방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4급 기관에서 3급 기관으로의 격상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작 향후 운영계획 등 지방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정책제언) 이미 지난 '08년 지방조직의 개편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며 기존 9개청 3개 사무소를 통합한 바 있음. 따라서 기관의 승격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현시점에서 개편을 제안 할 때는 통계청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며 앞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림.

##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대방안에 관하여 (짧은 질의)

### □ 현황과 문제점

- 나라통계시스템은 KOSIS(국가통계포털시스템)와 함께 통계청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서 KOSIS는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나라통계시스템은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된 데이터를 입력해서 통계를 생산해내는 일종의 통계입력 및 작성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통계작성기관 376개에서 913종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나라통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은 7% 정도 규모로 93% 기관이 외주를 통해 통계 입력 및 작성을 하고 있는 실정임

- (통계작성 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 현재 통계작성은 376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해당 기관의 통계인력 및 전문성 부족, 상호 기관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유사 중복 통계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질의 1) 현재 통계작성 기능이 376개 부처 및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문성과 신뢰도의 문제, 유사중복통계 문제 등은 결국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초래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계작성 기관에 나라통계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재 나라통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통계작성 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 2) 나라통계시스템 역시 통계작성의 표준화를 통해 정부 3.0 부처간의 칸막이 없애기와 정보공유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라통계시스템 구축이 통계작성기관 전반으로 확대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은 어떻게 예상하는지?